

사고 때마다 내놓는 땀질식 안전법안 '이제 그만'

건물 붕괴나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날 때마다 건설업체 처벌을 강화하거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날 때마다 땀질식 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조속한 통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부실 공사를 막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수차례 개정해온 법률은 크게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나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지난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제정된 뒤 노광진 수몰사고(2013년 7월), 서울 방화대교 구조물 붕괴사고(2013년 7월) 등이 잇따르면서 품질·안전·시공을 전문성 있는 전문 감리업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후에도 무려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건설현장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31차례나 법을 고쳤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품질·안전·시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 건 아니었다. 잇따르는 부실감리를 막지는 못했다. 당장 최근 2년(2019년~2021년) 간 부실 감리 등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감리 회사만 200여곳에 이르고 벌점을 부과받은 횟수도 600건에 육박한다. 감리의 독립적 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주자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산업안전보건법도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원청 책임 강화 ▲공공·대규모 공사의 안전관

건설기술진흥법 등 수 차례 개정에도 산업재해 예방 역할 미흡
건설안전특별법 등 산업현장 실태 제대로 반영, 입법 서둘러야

■ 국회 계류중인 건설안전 관련 법안

법안	내용
건설안전특별법 (김교흥)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법으로 규정,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희재)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 높이고 부당이익 몰수 추정하는 내용.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이수진)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수행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하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장경태)	불법하도급시 하수급업체, 발주자, 인허가권자까지 처벌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시 즉시 등록말소하는 내용.

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2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사의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했고 이같은 대책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무려 28년 만에 확 바뀐 전부개정안이었다.

개정안에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담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토록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벌금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려 12번 손질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모두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건축법도 여러차례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2020

년 상주 감리가 있어야 하는 건축공사를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 감리원 배치, 현장 관리인의 공사현장을 이탈을 막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20년 4월 이전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감리 자격 강화,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었다. 수십차례의 법안 손질에도 산업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2014년 486명이던 건설업 사망자는 493명(2015년)→554명(2016년)→579명(2017년)까지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확 바뀐 2018년에도 57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0년에도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39층 초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땀질식 법 개정이 아닌, 현장 안전 시스템 전반을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반발 등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꼼꼼한 수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0년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만 놓고 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업무 분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입법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고 부당이익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희재 의원 발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발의), 불법하도급 시 하수급업체, 발주자, 인허가권자까지 처벌토록 하고 건설공사 전부 하도급시 즉시 등록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교흥 의원은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와 관련)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두려움이 커지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통과될 경우 '모두 죽는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올 1월 초 법안을 심사소위까지 올렸지만 통과 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인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땀질식 법 개정이 아니라 현장에 적합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한 건설현장 풍토를 만드는 건 결국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이파크 붕괴 사고' 경찰 수사인력 늘린다

수사본부장 치안감으로 격상 인력 20명 증원 총 89명으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인력이 늘어난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번 주부터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을 20명 증원했다. 수사 인력은 모두 8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41명을 조사했고 10명을 입건, 14명을 출국금지한 상태로, 현대산업개발 본사 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수사본부를 확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현장에서 1년도 못돼 2차례나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데다, 건설현장의 부당한 관행과 불법 등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따라 수사본부 확대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일일 공사일지와 콘크리트 타설 일지, 레미콘 납품일지 등을 통해 콘크리트 부실 양생 의혹과 불량 레미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30억 화정 아이파크, 안전관리비는 고작 1억6000만원

조오섭 의원 안전관리계획서 공개
사고 예방 위한 안전투자 늘려야

1230억을 들여 초고층 아파트 4동(316세대)을 짓는데 들어가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0.1%에 불과했다.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수치라는 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 의원이 공개한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안전관리계획서' (이하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르면 2단지 건설 과정에 사용하겠다고 책정해놓은 안전관리비는 1억 6597만 143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산업개발측이 작성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을 뜯어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455만원) ▲공사현장안전 점검비(9520만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1600만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1760만원) ▲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3160만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100만원) 등이다.

25~39층 화정동 아이파크 4개동을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1236억 6420만원)를 감안하면 고작 0.13% 수준의 비용을 안전에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60조)에 따라 일정 비율을 책정하도록 정해진 것이라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현장은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일한 안전 인식을 떨쳐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노동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데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하는데는 쓰지 못하는가 하면, 산업현장 내 차량 유도원을 안전관리비로 고용하면서도 현장 진출입로 차량 유도원 고용에는 집행할 수 없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취조리만한 안전관리비도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가진단 키트 정리 광주·전남을 비롯한 4개 지역에 대해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된 가운데 24일 광주 북구 상사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고위험군(선별진료소 PCR검사)과 유증상자들의 방문에 대비해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h1> <p>기초반, 중급반</p>	<h1>상가매매(상무지구)</h1>	<h1>신축원룸매매(신축)</h1>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